

# 연금개혁 ‘세대갈등’ 번지나… 구조개혁 논의 힘로 예상

연금법 개정안, 청년 세대에 불리  
3040 의원들, 특위 재구성 요구  
“청년 세대야말로 논의 중심돼야”

여야 “세대간 균형 맞출것” 해명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이견 보여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을 골자로 한 개혁안이 청년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여·야 지도부는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p)씩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된다. 보험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돼 기성세대에 유리한 구조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사옥. /뉴시스

개정안 통과 이후 여·야 3040세대의 원 8명은 이번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이 소외됐으며, 미래에 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청년 세대야말로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미 수급 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수급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 부담은 젊은 세

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라며 “그러므로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3040세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 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의 주축이 됐던 여·야 지도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구조개혁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

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진 안된다”라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3040세대 국회의원들이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런 요청을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여당에서는)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향후 연금개혁 논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입법까지 난항을 예상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비롯해 앞서 논의됐던 구조개혁안들이 청년 세대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제시했다.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사회적 변수에 따라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출생률 반등 없이는

지급액 감소가 필연적인 만큼, 청년 세대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도 명확하다. 여당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지급액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자동 삭감 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실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전 세대에 걸쳐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21% 삭감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시는 분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고,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상황에서 장치를 도입하면 자동으로 (수급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반대 의견을 내신 만큼 특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연금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의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줄었지만… 여전히 ‘강남불패’

과거 거래위축 속 가격은 되레 올라  
전문가 “풍선효과·시장 왜곡 우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거래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부 단지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매수 문의가 있었지만,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반응도 나왔다.

26일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정책 발표 직후인 지난 19일부터 시행 전날인 23일까지 대치동과 잠실동 일대 공인중개업소에는 일부 매수 문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자금 조달 여건 등으로 실제 계약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 시행 첫날인 24일 이후에는

문의 자체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대치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관심은 있었지만 매수자들이 실거주 요건과 대출 조건 등을 부담스러워해 대부분 무산됐다”며 “현재까지는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잠실 엘스 인근 중개업소도 “규제 발표 전후로 매물이 일부 나왔지만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있으나 거래로 이어지기 어려운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 직전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한 단지들도 있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9일부

터 23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확인된 아파트 실거래 21건 중 13건이 직전 거래 대비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중개 거래 기준으로 표본 수가 적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과거 토허제 지정 이후의 흐름을 봐도 단기적인 거래 위축과 달리 가격은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잠실대청(잠실·청담·삼성·대치)은 토허제 지정 전 2년간(2018년 6월2020년 5월) 총 6856건이 거래됐지만 지정 후 2년간(2020년 6월2022년 5월)에는 1936건으로 71.7% 감소했다.

잠실동은 4456건에서 814건으로 무

려 81.7% 줄었고, 청담동(-61.4%), 대치동(-60.1%), 삼성동(-31.5%)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가격은 되레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 매매 가격변동률은 지정 전 2년간 22.66%에서 지정 후 23.82%로 더 커졌고, 잠실동도 같은 기간 20.79%에서 22.5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3.3㎡당 평균 시세는 대치동이 6437만원에서 8745만원으로 35.9%, 잠실동은 5758만원에서 7898만원으로 37.2% 상승했다. 청담동과 삼성동도 같은 기간 3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풍선효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턴트 부 수석은 “토허제 확대는 단기적으로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실업률 강화로 전세 공급이 줄고, 풍선효과로 강동구·성동구·마포구 등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 수요 차단이 목적이 될 수 있으나 과거처럼 시장 흐름을 되레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도 “2020년에도 거래만 줄고 가격은 반등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며 “수요·공급의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 반복적 규제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유효기간을 오는 9월 23일까지로 설정했으며, 향후 연장 여부 및 인근 지역 확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 동양생명, 순익 17% 증가… CRM지점이 견인

지점 51곳 중 연도평가 1위 달성  
설계사 정착률·계약유지율 최고

동양생명이 지난해 당기순이익 3102억원을 달성했다. 17.1% 증가한 수치다. 고객관계관리(CRM) 지점을 필두로 영업전략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26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영등포구 선유동에 있는 CRM지점은 건강보험판매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기존 계약을 분석한 후, 부족한 보장을 제안하는 컨설팅 영업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CRM 지점은 지난해 동양생명 지점 51곳 중 연도평가 1위를 달성했다. 상품 경쟁력과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사 정착률과 계약 유지율을 높인 결과라는 의견이다.



동양생명 CRM지점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양생명

13차월 설계사 정착률은 평균 96%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국내 보험설계사 총 60만6353명 중 13개월차 정착률은 47.3%다. 이 중 생명보험 설계사 정착률은 36.9%다.

지난 1년간 CRM 지점의 25회차 보험 계약 유지율은 평균 94.8%다. 지난

2023년 생명보험업계 평균(60.7%)을 상회한다.

이영자 CRM 지점장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 추천을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완전판매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사업 전개

MG 블루 웨이브 인사·노무 컨설팅  
올해 전국 80% 금고 참여 목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문가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펼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 블루 웨이브’ 조직문화 개선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558곳이 ‘MG맞춤 인사·노무 진단 및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새마을금고 약 350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80%에 달하는 금고에서 사업에 참여할 전망이다.

진단 컨설팅은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인사·노무 전문가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직접 상담한다. 아울러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새마을금고중앙회

조리한 관행, 조직 내 갈등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조직문화 혁신 및 구성원 간 소통 경영을 위한 근무부 자율화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소통 컨퍼런스 등을 시행하고 구성원들의 직장 경험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